Vol. 11
2025.11.20.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CONTENTS

Ⅰ. 입안 예고
Ⅱ. 조세심판사례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Ⅰ. 입안예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1) 입안 이유

-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 규정 마련
- 종이서류 제출 대상인 일부 민원에 대한 전산 제출 이용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장기간 투입 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 규정 마련 (제22조)	최초 환급신청할 때 소요량 산정이 불가능하여 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촉매 등)에 대해 **소요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초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건에 안분하여 추가 환급신청 허용 * 일괄환급 신청 원칙의 예외 인정
종이서류 제출 대상인 민원에 대한 전산 제출 허용	민원인의 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증명서의 정정·취하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정정·취하 신청 업무에 대해 종이서류 제출 의무 규정 폐지,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 업무 전산제출 허용

(3) 의견수렴기간

2025.11.19.

Ⅰ. 입안예고

2.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1) 입안 이유

- 관세행정 투명성과 관세행정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상이한 평가체계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규준수 평가제도들을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제도별 통합 시기는 법규준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 이에 따라,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법규준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도 평가항목, 점수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기업이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 평가대상 확대 및 관련 증빙자료 전산 제출 등 업체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체계를 도입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행정규칙명 변경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여러 개의 법규준수 평가제도의 통합에 따라 법규준수도 명칭 혼선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
법규준수도 평가체계 개편반영	**①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신설 (제4조, 별표 1)** 평가 실익과 점수 왜곡방지를 위해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최소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별표 1에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규정
	② 세부평가사항 개편(제5조, 별표 2) 타 유사 평가제도의 유용한 평가항목 수용, 최근 제도 신설·변경 사항 반영 등을 통해 세부평가사항을 개편하고, 자율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별표 2에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 규정
	③ 신고정확도의 정정항목 개편(제6조, 별표 3) 수출입업체 등의 중요정정과 경미정정 학목을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일치시키는 등 정정학목 구분 (중요, 경미)의 조정
	④ 점수산정 기준 변경(제6조) - 신고정확도 평가점수 만점 기준을 99점에서 100점으로 변경 * 감점사항 없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 - 특송업체 신고정확도 평가는 100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최대 배점 확대 (수출입업체) 5점 → **7점**, (특송업체) 7점 → **20점** (보세구역등) 7점 → **9점**

	⑤ 평가일 조정(제8조, 제11조) 법규준수도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일(평가결과의 제공일)을 조정 * 매 분기 다음 달 20일 → **25일**
	⑥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신설(제8조) 해당 증빙자료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통해 제출 * 표창, 간담회 또는 설명회, 교육,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
	⑦ AM협력도, 특송협력도 평가 관련사항 신설(제2조, 제8조) - AM 협력도, 특송협력도의 용어 정의 (제2조) -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확인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근거 규정
	⑧ 의견제출 제외대상 신설(제12조)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관세협력도 증빙제출 건과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특송협력도는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문구 수정	통합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제1조~제15조, 별지 제1호 서식)
	관련 문구 수정(제1조) 통합적으로 평가 → 평가
	법규준수도 의견서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 누락된 업체구분 추가(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하역업자)

(3) 시행일자

2025.12.20.

Ⅱ. 조세심판사례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18.9.11.부터 2019.9.30.까지 영국으로부터 458 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하여 축구용품 661 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제 241 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았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19.11.18.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21.2.5. 청구인에게 벌금 OOO 원 및 추징금 OOO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2.5.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을 하였음.

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 39 조 제 1 항에 따라 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 및 가산세 OOO 원 합계 OOO 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3) 결정일

2025.09.08. (조심 2025 관 0043)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개최(10.10)
- WTO·FTA 채널 등 다각도 대응 검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10월중 발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0(금)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2.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 수출액이 가장 컸던 '24.3분기 보다 14.9% 증가...미국이 수출국 1위로 올라서
- K뷰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수출 순위 바뀌어 >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K-컨텐츠의 열풍 등으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 2.0억 달러(-11.7%) 감소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4년 우리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처음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우리 화장품 수출액의 50%까지 차지하였으나, 올해 처음 10%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년 동기 보다 0.8억 달러(+10.4%) 증가하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수출 증가액도 가장 많아 >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63.2억 달러(+8.1억 달러, +14.6%), 색조화장품 11.6억 달러(+1.8억 달러, +18.9%), 인체세정용품 4.2억 달러(+0.9억 달러, +25.4%) 순으로, 기초화장품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1.5억 달러(10.5억 달러→12.0억 달러, +14.5%), 색조화장품 제품류 0.4억 달러(1.9억 달러→2.3억 달러, +21.7%)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1.6억 달러(13.5억 달러→11.9억 달러, -11.6%)로 감소액이 가장 컸고, 색조화장용 제품류 0.6억 달러(2.4억 달러→1.8억 달러, -24.3%) 감소하였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2억 달러(4.4억 달러→4.6억 달러, +4.8%),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6억 달러(2.1억 달러→2.7억 달러, +26.7%)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우리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

식약처는 K-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1월에는 필리핀이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PH-FDA, 필리핀 화장품 규제기관)에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플랫폼)'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출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정에 대한 번역본 마련(약 80건)하고, 웨비나 교육(약 17회)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 규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K-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9(수)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수)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금) 관보게재, 10.20(월) 발효되었다.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하였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4. 관세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본격 추진

-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지원,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⑤내수기업 경영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월)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균 내수소비 성장률 : ('96) 9.1% → ('20) 1.2% //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 비중 50% 미만

○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공무직 75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안내 중

○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 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둘째,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케이(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케이(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 10.29.~11.30.)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셋째,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을 높인다.

○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넷째,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케이(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현행) 수입원재료 입항전 사용신고 → 보세공장 반입 → 외주작업장 반입

○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케이(K)-푸드 수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1종, 1,245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

** (현행) 해체작업 완료 후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시점까지 해체 고철 장기간 보관, 조선소 저장시설 활용 제한, 보관비용 증가 및 재활용 투입 지연 등 문제

○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 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간 카페리선(GNLST) 정기 운항에 따른 CIQ·국제여객터미널 재정비

⑤ 다섯째,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①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우편물 활용 수출 지원 ②수출품목 HSK제공, ③해외통관 정보 제공 등

□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